

# 중대재해 없는 부산/울산/경남을 만들자! 합동 기자회견 진행

진군호 기자 (부산본부) | 승인 2024.04.26 16:08

중대재해 신속한 수사과 처벌 촉구,  
종사자 안전보건 참여권 보장,  
산재노동자 치료받을 권리 침해 중단 요구  
부산노동청장 면담 진행



중대재해 신속한 수사과 처벌 촉구, 종사자 안전보건 참여권 보장, 산재노동자 치료받을 권리 침해 중단 촉구 부산/울산/경남 노동자 기자회견

4월 26일 금요일 10시 30분에 부산노동청에서 중대재해 신속한 수사과 처벌 촉구, 종사자 안전보건 참여권 보장, 산재노동자 치료 받을 권리 침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울산/경남본부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중대재해 신속한 수사와 처벌 촉구, 종사자 안전보건 참여권 보장, 산재노동자 치료받을 권리 침해 중단 촉구 부산/울산/경남 노동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23년 부산울산경남에서 101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희생당했다. 하지만,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고 있다.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작업 중지권은 유명무실하고, 구호로만 존재한다. 노동자 안전보건 참여권은 형식적이며, 문서로만 존재한다”며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중대재해 신속한 수사와 처벌 촉구, 종사자 안전보건 참여권 보장, 산재노동자 치료받을 권리 침해 중단 촉구 부산/울산/경남 노동자 기자회견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남 본부장은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신속한 기소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원인규명을 제대로 할 때 중대재해와 사회적 참사가 없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가 가능하다. 죽지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민주노총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신속한 수사와 처벌 촉구, 종사자 안전보건 참여권 보장, 산재노동자 치료받을 권리 침해 중단 촉구 부산/울산/경남 노동자 기자회견

민주노총 울산본부 최용규 본부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조사하기는커녕 죽은 사람을 탓하고 유족들의 책임으로 몰아간다. 국가권력 고용노동부는 여기에서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노동자들은 일하러 나가는 것을 싫어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이 자기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라고 요구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신속한 수사와 처벌 촉구, 종사자 안전보건 참여권 보장, 산재노동자 치료받을 권리 침해 중단 촉구 부산/울산/경남 노동자 기자회견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김유철 지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이 작년 5월 한화그룹으로 인수가 되면서 현재까지 총 3건의 안타까운 중대 재해가 있었다. 즉시 전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맞게 최고경영자를 구속 수사해야지 현장의 안전이 확보되고 또 다른 중대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요구 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자본의 편에 서서 작업 중지 범위를 축소시키려고만 했고, 사고가 있는 이후에 또다시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 현장의 안전이 확보되고 노동부가 나서서 책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신속한 수사와 처벌 촉구, 종사자 안전보건 참여권 보장, 산재노동자 치료받을 권리 침해 중단 촉구 부산/울산/경남 노동자 기자회견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본부 현미향 활동가는 “산재보험은 산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여전히 보상은 적고 인정 기준은 빡빡하다. 산재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노동부가 진심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보완해야만 제대로 된 산재보험 운영될 수 있다. 산재보험을 개악하려는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신속한 수사와 처벌 촉구, 종사자 안전보건 참여권 보장, 산재노동자 치료받을 권리 침해 중단 촉구 부산/울산/경남 노동자 기자회견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은형 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경영책임자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하라! 위험작업 시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하라!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 조선소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해결하라!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하청노조 노동안전보건활동 참여 보장하라! 산재노동자 치료받을 권리 침해 중단하고 산재보험 개악 시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안을 발표했다.



중대재해 신속한 수사와 처벌 촉구, 종사자 안전보건 참여권 보장, 산재노동자 치료받을 권리 침해 중단 촉구 부산/울산/경남 노동자 기자회견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부산노동청장과 면담을 통해 요구안을 전달했다.



진군호 기자 (부산본부) [sigma9no@nate.com](mailto:sigma9no@nate.com)